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19
----------	-----

발의연월일 : 2024. 6. 21.

발 의 자 : 정성호 · 민병덕 · 백승아
박희승 · 장종태 · 홍기원
염태영 · 송옥주 · 황 희
이병진 · 윤종균 의원
(11인)

제안이유

국회는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하여 2021년 8월 성범죄, 군인등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 와 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이 관할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또다시 외압논란으로 군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일게 된 바, 수직적 상하관계로 사건의 은폐가 일어나기 쉬운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구체적 사건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한 지휘·감독을 명문화하고 군검사의 수사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도록 함.

또한 재판권이 군에 있지 아니한 사건은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게 하고, 이첩이 지연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이 군 수사기

관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사건처리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군 검찰의 직무 중 범죄수사 범위에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함(안 제37조제1항제1호).
- 나.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이 검찰사무 중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 서면에 의함을 원칙화하고, 군검사의 독립성을 우선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39조의2 신설).
- 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건을 관할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함(안 제228조의3 신설).
- 라.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해당 사건의 이첩을 군검사 또는 군 사법경찰관에 요구할 수 있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228조의3 신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범죄 수사”를 “범죄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지휘·감독의 원칙) ① 제38조와 제39조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은 그 목적과 내용, 이유가 기재되고 지휘·감독자가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서면을 작성할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나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지휘·감독한 내용을 24시간 이내에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휘·감독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수사와 공판 진행의 공정성을 위하여 소속 군검사가 제37조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8조의3(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처리) ① 군검

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②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각 수사기관이 관할하는 사건으로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의 이첩을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및 영장의 집행 또는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1.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장의 신청·청구 여부 결정이나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7조(군검사의 직무) 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p> <p>1. <u>범죄 수사</u>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항소심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행위</p> <p>1의2. ~ 3. (생략)</p> <p>② (생략)</p> <p><u><신설></u></p>	<p>제37조(군검사의 직무) ① ----- -----.</p> <p>1. <u>범죄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u>-----</p> <p>1의2.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9조의2(지휘·감독의 원칙) ① <u>제38조와 제39조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은 그 목적과 내용, 이유가 기재되고 지휘·감독자가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서면을 작성할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나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지휘·감독한 내용을 24시간 이내에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휘·감독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u></p> <p>② <u>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u></p>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①·② (생략)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
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
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
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및 영장의 집행 또는 집행지휘
를 촉탁할 수 있다.

1.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
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장의 신청·청구 여부 결

정은 수사와 공판 진행의 공정
성을 위하여 소속 군검사가 제
37조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
야 한다.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정이나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
은 제4항의 촉탁이 있는 때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삭 제>

제228조의3(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처리)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
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
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
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
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건
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에 이첩하여야 한다.

②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은 각 수사기관이 관할하는 사
건으로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
우 그 사건의 이첩을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
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및 영장의 집행 또는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1.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장의 신청·청구 여부 결정이나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